

의료서비스의 보편성 vs 효율성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의료서비스 개혁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만한 일이다. 이 논쟁이 올해 예비선거를 치르고 있는 미국에서 한창인 것을 보면, 그 놀라움은 더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가 잠잠한 것은 아니다. 지금도 쇠고기 수입 논의 때문에 한 발 물려서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회단체와 정부 사이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둘러싸고 한 바탕 겨룸이 있었음은 누구나 기억할 것이다. 의료서비스 개혁은 잠시 논의가 중단되었다고 할지라도 가까운 시일에 다시 부상할지도 모르는 주제임이 명확하다. 이번 호에서 미국, 영국, 네덜란드 3개국의 의료보험 개혁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하면서 3개국을 동시에 비교해 보는 자리를 마련한 것도, 의료서비스 개혁이 국내에서 휴화산과 같이 잠시 쉬는 듯해 보이거나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주제라는 점이다.

최근 신문을 읽어본 독자라면, 누구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말고도 건강보험과 관련한 기사로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지난해 2,400억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2,500억, 내년에는 무려 1조 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방식은 어떠한 시장적 요소를 건강보험에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개선방향이라 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번 호 김주영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으면서 국민의료비 대비 가계지출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은 모순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게다가 고령사회로 어떠한 나라보다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비 부담의 상승은 현실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처럼 의료비 가계부담이 높다는 사실에서 볼 때, 한국의 건강보험은 실제로 “적용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경우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영국과 미국의 하이브리드가 아닐까 하는 의문마저 든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8할 정도가 일을 하고 있으며, 3~9인 규모에 해당하는 기업의 절반이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현실이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진다. 우리의 경우에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7년 3월)”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의 76.6%와 비정규직의 41.8%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건강보험 미가입자라고 해서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됨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통계의 해석은 조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통계로부터 보편적인 의료서비스의 혜택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히 살펴야 함을 환기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의료서비스의 비용효율성(cost-effectiveness)을 올리는 것이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우리의 제도가 가진 강점을 그대로 살려야 함은 물론이다. 이 보편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문제를 어떻게 동시에 해결할 것인가? 어찌 보면 쌍곡선과 같아 보이는 이 두 문제의 해결에 이번 호의 기획특집이 조그만 실마리라도 제공하는 객관적인 판단 자료가 된다면, 이 특집이 가지는 의의는 충분할 것이다. 독자의 뜨거운 관심과 건강한 반응을 기대해 본다. **KLI**